

# “농촌유학 활성화 전략 제도 수정을”

김정기 도의원, “시골체험 수준으로 인식 지역 활력 운운은 어불성설  
재정에 의존 경비 직접 지원방식 한계점 뚜렷...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  
농촌유학 활성화 주체인 학교, 피동적 객체 전략 우려... 개선 시급”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제도 수정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담 부서 신설(교육소통협력국)을 필두로 해서 전북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거버넌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도 그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도 및 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유학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정기 의원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농촌유학 활



성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농촌유학을 협소한 개념에 한정시키고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농촌유학을 도시 아이들의 시골체험 수준으로 바라보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둘째는 농촌유학 학생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비 직접지원방식의 문제점이다. 현행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은 가족체류형과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학생당 일정 비용을 직접지원함으로써 농촌유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정부담에 의존해서 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농촌유학생 수용이 가능해서 한계가 뚜렷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농촌유학 활성화의 주체가 전도돼 있다는 점도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았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사업

을 주도하고 학교는 ‘협력학교’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농촌유학 활성화의 주체가 돼야 하는 학교를 피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기 의원은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생태체험이나 시골체험이 아니고 인구소멸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교의 경쟁력을 살리고 학부모와 학생으로 하여금 농촌유학을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면서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의 제도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초·중·고교는 총 770개교로 이 중 58.8%에 해당하는 451개교가 농촌에 소재한 농촌학교이고,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293개교로 전체 학교의 38%에 달한다.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이 곧 전북의 교육현실과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사업이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 확대해야”

이명연 도의원



입주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몇 개나 더 입주할 수 있을 것인지 제3금융중심지가 될 전북 금융의 허브로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모인지 무척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가 유치 노력 중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의 유치 장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장소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때 ‘라미’ 전북국제금융센터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시설, 숙박과 상업시설 등 그 역할에 맞는 합당한 외형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0)은 지난 14일 전북도가 금융 인프라 확대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추진 중인 전북국제금융센터(IFC)의 건립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전북도가 전주시 민성동 일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2억5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IFC)의 규모가 왜소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각각 55층, 63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하면서 “전북국제금융센터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 전주시의회, 박금태 변호사 신규 고문변호사로 위촉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법령 해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위해 박금태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지난 14일 위촉했다.  
신임 고문변호사는 조례의 제·개정 에 따른 각종 법령 저촉 여부,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 등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한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8기로 전주시청 고문변호사를 거쳐 전주시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기동 의장은 위촉사에서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이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의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는 2007년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입법 기능 강화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이영아 기자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방문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후생관에서 김민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성주·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장,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 등 참석자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방문을 갖고 학생들과 조식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업무보고 청취 “인구감소 대응 정책 중요”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전주0)는 지난 14일 전북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준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 전북 금융산업 육성 추진, 대관법 개정 추진 상황, 2023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추진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 및 지방대 위기 극복 등으로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전북 균형발전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인구를 포함한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서언이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0)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E) 사업에 전북테크노파크가 우선 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RISE가 지역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하며 지역 대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전라북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나 두드러진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한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도내 대학 경쟁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학교 유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증원으로 정원만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과 협력해 공모사업 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수봉 위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명분과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당부하고, 전북대 유류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인구정책과 관련한 지역소멸 대응기금 선정과 사용에 대해 일부 기관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보고에 지난 1차 업무보고 결과의 성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0)은 “전북의 인구감소 예방을 위해 결혼장려, 출산율, 보육정책, 청년주거, 직장문제 등 단계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반영해야 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북만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지역 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자에게도 지원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 도내의 교통오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더불어 주변 여건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 전북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RISE 선정, 지역위기 돌파 전략 마련을”

김정수 도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북도는 리이즈 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전북도가 그간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의 규모와 방식 등을 동일하게 차용한다면 그 성과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따라서 통상적 대응이 아닌 다양한 언어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대학-교육청-전북도-지역산업 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리이즈 사업이 지방대학의 지원력 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지난 14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사업, 약칭 RISE) 선정이 단순한 지방대학의 살리기 수준이 아닌 지역위기 돌파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김정수 의원은 “최근 전북 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증원율을 보면 우석대 78.8%, 군산대 83.3% 등으로 나타났고, 학령인구가 감소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대학의 지원력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올 1회 추경 최종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은 지난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간 이어진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대책과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공무제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계속비 사업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의 심사결과 세출 요구액 5,672,919,579원, 0.02% 감액된 5,672,919,579원으로 최종 의결 되었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차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에 활기를 주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투입과 균형집행에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도의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지원 특위 출범

위원장-김정기 도의원 · 부위원장-김슬지 도의원  
군산 · 김제 · 부안 출신 도의원 9명 위원으로 구성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설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의 개발 효과를 극

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정기 위원장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 간에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를 도출하는 등 타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농어촌 맞춤형 거점형 공동어린이집 필요”

김슬지 도의원



홈페이지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기기로 상담까지 완료한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사가 없어 폐원한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육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북과 유사한 상황인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원 실시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공모와 지원에만 기대어 도내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므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농어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점부터 차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슬지 의원은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역설적인 농어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거점형 공동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전용차량 배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 2월 도내 한 기관의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마을 단위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마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공동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슬지 의원(교육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보육난민이라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노동강도 보육 서비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단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집은 무려 300개가 사라졌고, 이 중 읍면지역 행정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한 곳인 지역이 무려 49곳에 달하고 49곳의 평균 원아 총원 비율은 42.9%에 불과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런 현실에 복지부의 5명의 원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와 0세부터 2세의 원아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은 정원을 받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인데, 전북 내 어린이집 중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